

# 지방청년 수도권 대학·기업 갈 필요 없는 시스템 만들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 <3> 대학·민간기업

### 낙후지역 이전 특별법 제정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기관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유명대학, 대기업의 낙후지역 이전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강제 조항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 시 2를 비롯한 향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에서 가장 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우선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전은 균형의 효과를 보기 어렵는데다 '수도권의 외연 확장'에 따른 먼

지역의 소외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가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직업, 교육 등을 이유로 20~30대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오는 2050년 광주와 전남의 인구는 122만명, 157만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인구의 감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발전·혁신의 주축이 되는 젊은층이 수도권 등으로 나가 살면서 지역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지방인구 4만4000명 가운데 직업 1만7000명(38.6%), 교육 7000명(15.9%)의 비중을 보였는데, 2019년에는 8만3000명 가운데 직업 6만4000명(77.1%), 교육 2만1000명(25.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거 20~30년간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인재들을 대거 흡입하고, 졸업한 뒤 이들은 대기업 분사 8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서 직장을 찾아 거주하고 있다. 여기서 전남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인구 감소로 초·중학생마저 씨가 마르고 있다는

수도권 유출 인구 대부분 젊은층 전남, 초·중학교 절반 '미니학교' 거점국립대도 정원 못채울 위기

### 전남도 파격적 기업 유치 나서

### 정부 수도권 완화로 성과 불투명

### 대학·기업 지방이전 법제화 필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지난 2018년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초등학교 489곳 중 240곳(49.1%), 중학교 256곳 중 125곳(48.8%)이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미니학교였다. 초·중학생의 부모에 해당하는 30~40대가 지역 내에 그만큼 없다는 의미다.

과거 수도권 유명대학들과 경쟁을 벌였

던 지방거점국립대도 점차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올해 신설했다. 국비 1080억원을 투입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3곳을 선정, 지역내 대학들끼리 공동·복수학위를 주는 '공유대학'을 만들고,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대 등 15개 대학, 한국전력공사·자동차부품연구원 등 31개 지역 혁신기관과 플랫폼을 구성해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가 수도권 대학들에 밀려난 지방대학을 살려내고, 관련 대기업, 연구기관 등의 집적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혁신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력, 미흡한 지역 여건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업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5억~10억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상향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맞춰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제도를 마련, '1000억대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과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이 50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시군 등과 협의해 투자 부지를 무상 제공 또는 무상 임대하고,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투자액과 고용 규모에 따라 1000억원까지 늘려 잡았다. 없는 살림에 상당한 재원을 내걸고 기업 유치를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처로 성과를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몰려 있고, 물류·정보·인재 등을 갖고 있는 수도권에 머물거나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은 사람·공간·산업이며, 그 중심은 당연히 사람일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대학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대학, 중견·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기업·대학의 지방 이전 시 국가 등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국가의 책임과 부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박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이 상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립대 연합체제 또는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역인재들이 굳이 수도권의 대학과 기업에 갈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부동산에 등돌린 민심...민주 지지도, 통합당과 0.8%p차

### 리얼미터 조사...30대·여성 ↓

민주당과 통합당 정당 지지율 격차가 처음 소수점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4면>

리얼미터는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5.6%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통합당 지지도는 3.1%포인트 오른 34.8%로 조사됐다. 통합당 지지도는 정당 직후 기록(2월 3주차·33.7%)를 상회하는 역대 최고치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0.8%포인트로, 처음으로 소수점으로 좁혀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통합당(37.1%)이 민주당(34.9%)를

넘어섰다.

민주당의 경우 핵심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30대(35.6%·10.1%p ↓)와 여성(36.2%·3.4%p ↓)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통합당의 경우 여성(33.1%·5.2%p ↑)과 중도(37.0%·4.3%p ↑)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민심 이반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 송갑석·김승남 의원 합의 추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을 뽑는 오는 8일 대의원대회는 '민주당 원팀' 정신을 살려 송갑석(서구갑)·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에 대한 합의추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의원 간 경선 대신, 양보와 합의를 통해 선출되는 지역위원장인 만큼 이들 의원들은 '호남 정치 복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송갑석 의원은 "호남인의 염원인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광주시당부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당 원팀 정신은 국민의 지지에

대한 보답이며, 민주 진영의 정권을 재창출하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과거에도 그랬듯 광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최대 현안이며, 한국형뉴딜과 관련해 광주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린뉴딜은 호남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면서 "광주가 그린뉴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광주의 또 다른 현안인 구간경제조정문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현안도 8명의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풀어가 갈 것이며, 나아가 전남·북 의원들과 함께 정치적·경제적으로 호남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을 이끌게 될 김승남 의원도 정권 재창출과 전남지역의 정치·사회적 통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2년 동안 강한 전남도당을 건설하고, 전남이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의 청년과 여성을 육성·발굴·교육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당이 지역위 간 소통과 교류의 창고 역할을 하고, 전남 동부



송갑석 의원

김승남 의원

권과 서부권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남의 관광산업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예산을 확보하고, 그린뉴딜 성공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당대표 이낙연 69%·박주민 14%·김부겸 11%

### 리서치뷰 여론조사

내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야권 단일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진행한 가상 대선 대결 조사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2%로, 민주당(41%)보다 1%포인트 높았다.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박한 응답이 46%로 야권 단일후보(36%)보다 높았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민주당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후보자가 누군지 묻는 결과 이낙연 후보가 6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박주민 후보 14%, 김부겸 후보 11%였다. 이 조사는 미디어오늘 의뢰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신세계안과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